

# 기 고

## 민간 선투자 적극활용을



김 홍 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단년도 정부예산에 제약받지 않고 민간이 자금을 우선 투자해 완공을 앞당기면 정부는 국회로부터 미리 승인받은 5년간의 계속비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대가를 추후 지급하게 된다.

지난 참여정부 5년간 사회기반시설(SOC) 부문에 대한 투자는 재정규모 증가 규모인 연 7%에 미치지 못하는 2.5% 수준에 그쳤다. 이로 인해 일부 건설현장의 경우 5년 내지 7년이 적정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으로 10년에서 최대 18년까지 장기화되어 왔다.

공기 지연은 현장관리비 등 건설사의 관리비용 증가, 물가상승 등에 따른 정부의 총사업비 증가 등으로 기업과 정부 모두에게 부담을 증가시킨다. 또한 건설 장기화에 따른 인근 주민의 소음, 교통체증 등으로 국민생활 불편을 가중시킨다.

### 정부·업계, 국민 모두 윈-윈

요즈음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소비심리의 위축, 실업률 증가, 경기침체 등으로 온 나라가 어려운 상황이다. 민간 선투자는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 시기에

민간의 여유자금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그 가치가 높다. 건설업계 또한 민간 선투자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당면한 건설산업의 위기 극복뿐만 아니라 SOC에 대한 공공투자가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선투자를 위하여 계속비 사업의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공공보증제를 도입하여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공사비 절감에 따른 총사업비 인센티브 반영, 조기완공시 투자금 조기지급 등을 통해 건설사의 조기완공 유인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SOC의 적기확충과 건설업계 지원을 위하여 민간선투자제도 시행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조기완공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현재 정부는 국고채 부담행위와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국고채 금리 수준의 인센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시중 조달금리 수준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선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시행 첫해에 최대한

많은 건설사의 참여를 통한 성공적인 정착이 필요하다. 이를 고려하면 국고채 금리 이상의 지원을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인센티브 확대, 중소건설사 지원

또한 금융조달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건설사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및 조달금리 등에 있어 공공보증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소건설사에 대한 차별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간선투자제도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시행되어야 한다. 단년도에 그치거나 축소되는 제도가 될 경우, 다음 년도에 예정된 사업이 금년도에 조기 시공되어, 일감이 감축될 우려가 있다.

이런 경우 중소기업의 인력과 장비수급이 교란되고 공황상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도 시행에 앞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앞으로 충분한 준비와 치밀한 계획을 통한 민간선투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기대한다.

빨리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정부가 예산을 천천히 지원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 그 주요 원인은 정부재정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예산의 효율적인 배분도 중요하지만, 민간의 여유자금에서 차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만들어진 제도가 민간선투자이다.